

광주시의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례안 반발

상생 협약 무시한 채 전남도 독단 입법예고 조례안 철회하고 시·도지사 약속 이행 촉구

전남도가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2023년 이후에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광주일보 11월 7일자)과 관련 광주시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발생한 지방세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예초 협약을 무시한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김익주(민주·광산구1) 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 274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에서 입법예고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철회하고 혁신도시 기금 조

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익주 위원장은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금 조성 규모와 조성 시기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전남도의 기금조성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양 시·도지사 및 상생발전위원들이 합의했던 약속사항을 파기선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양 시·도지사의 약속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 임미란 의원(민주·남구3)도 지난 8일 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도가 최근 광주 시와의 최종 협의 없이 공동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단독 입법예고했다"면서 "이는 양 시·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파기선언이며, 공동혁신도시로서 서로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하자는 큰 뜻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 곧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발표 했다"면서 "시·도지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광주·전남이 미래 세천년을 함께 할 동반자이자 공동운영체임을 인식해 전남도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당초 합의한 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시·도는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기관 등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모아 쓰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2023년 이후에 기금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초 약속에 따라 그 이전에 공동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나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2925억원(이전 공공기관 포함 혁신도시 전체)의 지방세가 쌓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도는 537억원(이전 공공기관 납부액)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시대적 소명 갖고 반드시 성공"

이용섭 시장 예산안 제안 설명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 2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의 제2회추경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저대형 과제"가 되어 이 일의 성공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

며 사회 대통합의 혁신정책이다"고 광주형 일자리를 정의했다.

일부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반대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며 "하지만 현재의 일자리 조건과 환경에 만족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처럼 위기에 무더져다가 결국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현대차가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 이 모델을 자동차 분야에서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다른 분야로,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금 있는 일자리들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광주시의회는 19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수정 위원장과 최영환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인사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란, 김용집, 나현, 박미정, 조석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후 임명될 때까지 활동한다.

인사특위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하고 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낸다

신수정 위원장은 "이용섭 시장에 전속된 공공 기관장 임명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 공기업의 장으로서 업무 수행력과 도덕적 흠결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새 자동차 번호판.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자들이 내년 9월부터 변경될 자동차 번호판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는 앞자리 숫자 한자리가 추가된다. 국토부에서는 기존 번호판(위)을 포함한 5개 번호판 디자인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번호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낙지목장 갯벌낙지 10배 늘어

전남도가 추진하는 낙지목장사업이 낙지자원을 최대 10배 증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전남해양수산기술원에 따르면 낙지목장 사업지구의 어미낙지 방류 전·후 자원량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배까지 자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원량 조사는 어미낙지 방사 이후인 7~10월 목장 내 무작위로 100㎡ 10개 지점을 선정해 낙지가 서식하는 굴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낙지 서식굴이 4~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낙지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6067t, 1478억 원 규모다. 이 중 전남지

역에서 전국의 67%인 4036t이 잡히고 있다. 한 해 수입량 3만6265t, 2억4300만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원 회복이 시급하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기술을 확립하고 순천, 무안, 신안, 함평지역의 16개 어촌계로 확대해 기술을 보급했다. 또 어미낙지 1만여 마리를 교잡·방사해 100ha의 목장을 조성했다. 낙지목장 조성사업은 포란 시기 어미낙지를 방류함으로써 갯벌에서 2개월간 산란토록 하고, 그 어미낙지는 3개월간 어미낙지의 보호로 생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성비하·폭언 전남도의원 퇴출해야"

여성사회단체 제명 요구

전남도의원의 동료 여성의원들에 대한 폭언과 비하 발언이 지역사회는 물론 여성계 반발까지 불러오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지역 12개 여성사회단체는 19일 전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김홍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참여 단체는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회, 목포포텐더연구소, 목포인권평화연구소,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행복누리, YWCA전남협의회, 성폭력추방을위한함평군·장성군대책위원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여성위원에게 막말하고 여성비하 발언까지 한 A 의원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막말 의원을 의회에서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말 피해 당사자인 도의회 여성위원장의 지역구인 무안주민들도 이날 오후 도의회를 찾아 이용재 의장을 면담하고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퇴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건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김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처를 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협상 12월말로 연장

광주도시공사-호반건설시업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시업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을 애초 11월 19일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간이 60일은 촉박하다는 데 양측이 동의해 이뤄진 결정이다.

19일 광주도시공사는 "향후 협상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현안사항에 대하여 법률검토 및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조성되고 유휴지 부지는 장기간 방치됐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 찾기에 노력을 집

중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협상을 통해 대부분 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말까지 사업협약 체결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시협상에 호반 대표가 참여해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상적으로 협약이 체결될 경우 지난 10년 이상 담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호반 측이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는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숙박시설, 수변공간(워터파크),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등 조성계획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되면 지난 45년간 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예상·50KW급 매월 150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